

1980년대 한국의 학생운동과 부림사건의 현재적 의미*

정승안**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학생운동사' 연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
- III. 1980년대의 학생운동과 특징
- IV. 이른바 '부림(釜林)' 사건
: 조작된 조직화가 역사로 남게 되다
- V. 지역내 운동의 성장과 부림사건
: 민주화운동 주체들을 형성하다.
- VI. 부림사건의 현재적 의미

| 국문초록 |

한국 학생운동은 사회변혁운동과 정당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1980년대는 이른바 '학생운동의 시대'였다. 학생운동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구조 및 동학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당대의 시대정신을

* 본 논문은 2019년 10월 31일 부산광역시 주최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학술대회 때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동명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교수 / sovong@nate.com

밝히고 우리시대 민주주의의 성찰적 재구축의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여기서는 80년대 학생운동의 흐름과 부림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조명한다. 학생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과 80년대 초반 학생운동의 흐름을 살펴보고, 부림사건의 운동사적 의미와 배경에 주목한다. 그리고 부림사건을 통해 오늘날 학생운동에 던지는 몇 가지 함의를 짚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생운동이란 학생들이 교내의 다양한 문제들이나 정치사회적 문제나 쟁점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단절된 한국의 학생운동이 전국적 조직을 지향하며 대중적 사회운동의 주축으로 등장하는 1980년대를 전후한 시기가 본격적인 학생운동의 시작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980년대 초반의 정세와 광주항쟁에 대한 평가에 따른 다양한 학생운동내의 논쟁들로 이어진다. 이른바 무림-학림이 그것이다. 전국민주주의학생연맹-학림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발단이 되어 부림사건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비록 부림사건이 조직화된 준비와 결의에 의한 결과물은 아니었고, 권력의 조작과 억지에 의해 구성되었다지만 결과적으로 부산지역의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자생적으로 형성되던 부산지역의 학생운동 세력들이 부림사건을 계기로 다양하게 분화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전개되는 부산지역의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운동의 새로운 조직화에 대한 성찰들도 뒤따랐다. 특히 부림사건의 흐름을 따라 가다보면, 학생운동의 선도성에 대한 인식과 자각 그리고 훈련된 활동가들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배출했다는 학생운동의 주요한 일반적인 논거와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학생운동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다.

주제어 : 부림사건, 학생운동, 민주주의, 선도성, 양서조합

I. 들어가며

어떤 사람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는 현재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지나간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들에 대한 확인과 재평가의 작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기 마련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사건 및 기록들의 정리와 기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87년 6월항쟁 이후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논의들도 붓물 터지듯 넘쳐 흘러왔다. 다른 항쟁사에 비해 조명받지 못해왔던 10.16부마항쟁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명명되었다. 또 34년 만에 ‘부마항쟁법’이 만들어졌으며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의 진상규명위원회의 부실한 활동과 행태들은 공고한 권위주의의 잔재가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를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촛불시민의 민주주의혁명을 계기로 표출된, 민주화운동을 체험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대중민주주의의 경험이 없었다면 역사의 물줄기는 언제든 되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거리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민주주의 운동사에 대해 지나가버린 과거의 사건이나 한 장면들로 치부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논의들과 현대적 재조명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곳이 바로 민주주의의 확산과 정치사회화의 과정이며, 정당성획득을 위한 기억과 상징을 둘러싼 지난한 투쟁의 장이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권위주의와 독재정권들에 대한 끊임없는 민중항쟁의 역사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종료된 후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는 압도적으로 학생운동의 역할이나 비중이 컸다. 한국의 학생운동이 1960년 4월혁명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사회

의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것이다.

여기서는 80년대 학생운동의 흐름과 부림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학생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과 80년대 초반의 학생운동의 흐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림사건의 운동사적 의미와 배경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부림사건을 통해 오늘날 학생운동에 던지는 몇 가지 함의를 짚어볼 것이다. 물론 운동사와 사건사의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엄밀한 기초자료의 검토와 이를 위한 사건당사자들에 대한 구술면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체적인 운동사적인 맥락의 검토없이 구술작업에 들어갔을 때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의 개괄과 선행연구작업이다. 이어지는 후속연구에서는 구술면접 자료를 통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II. ‘학생운동사’연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

학생운동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구조 및 동학을 설명해 줄 뿐만아니라, 당대의 시대정신을 밝히고 우리시대 민주주의의 성찰적 재구축의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여전히 크다²⁾. 한국에서의 학생운동은 사회변혁운동과 정당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80년대는 이른바 ‘학생운동의 시대’였다³⁾. 정근식(2013)⁴⁾은 4월혁명에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학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2013, 7쪽.

2) 이창인, 『한국 학생운동의 연구경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5, 역사학연구소, 217쪽.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앞의 책, 2013, 7~8쪽.

4) 정근식, 『학생운동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2013.

생운동의 주체가 변화한 이래 1997년 한국경제의 위기와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시민운동의 역할이 증대된 지점까지를 이른바 학생운동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운동의 이러한 시기별 구분과 운동사의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구술사나 여성사 등의 연구영역과 방법에 따른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1. 시기구분과 관련한 논의들

한국에서의 학생운동의 태동기를 유영익(1987)⁵⁾의 연구에서처럼 한국 학생운동의 기원을 성균관과 개화기의 유생들에게까지 소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한국 근대 학생운동이 ‘한국의 전통사상은 물론 기독교, 자유주의, 민족자결주의, 사회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 종속이론, 해방신학 등 여러 가지 외래사상의 영향하에 추진·전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동사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학생운동은 해방과 한국전쟁, 군사쿠데타를 거치면서 사실상 단절된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다. 특히 4월혁명의 시기에 고교생들의 비중과 역할이 높았다는 사실과 엘리트주의적인 속성들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적 사회운동의 주축세력으로 등장한 80년대를 전후한 시기부터가 본래적 의미의 학생운동의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근식⁶⁾은 학생운동의 시대는 30여 년간의 장기국면에서 파악되어야 하는데, 4월혁명에서 박정희 정권이 종말을 고했던 18년의 시기와 1980년 광주민주항쟁에서 1997년까지의 17년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조희연(1990)⁷⁾은 사회운동사적으로 80년대는 70년대까지

5) 유영익, 『한국학생운동사개관』, 『아세아연구』 77,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7.

6) 정근식, 앞의 논문, 2013, 22~23쪽.

7) 조희연, 『80년대 한국사회운동의 전개와 90년대의 전망』,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의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운동이 변혁운동으로 자기 정립하고 나아가 변혁운동으로서의 사상이념적·대중적 기초를 강화시켜 온 시기라고 보고 있다.

물론 국가권력의 탄압의 정도에 대한 정세분석과 인식, 이에 대한 대응방식 그리고 이념적 성향과 조직화의 정도 그리고 대중적 반응과 영향력에 따라 다양한 시기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사회운동사를 다루는 대부분의 논의에서 70-80년대의 운동사를 구분 짓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80년 5월의 ‘서울의 봄’ 또는 ‘서울역 회군’ 그리고 ‘5.18광주항쟁’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최연구(1990)⁸⁾는 80년 5월 ‘서울의 봄’을 좌절과 실패로 보내야 했던 학생운동은 80년의 쓰라린 패배에 대한 반성을 거치면서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고 향후 변혁운동의 전망을 모색한다고 보았다. 강신철(1990)⁹⁾은 80년의 패배와 광주항쟁에서의 아픔을 ‘무림사건’, ‘민노련’, ‘민학련’, ‘부림사건’ 등의 계속되는 심각한 조직적 침탈을 견뎌내면서 성장을 이루어가고, 82년 이후의 양적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한다.

2. 연구방법론의 문제

윤선자(2005)¹⁰⁾의 논의에서처럼 그 당시의 목표와 지향이 무엇이었는가를 고찰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항쟁과 운동을 추진하였던 당사자들이 발표한 각종 문건들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물론 문건들에 명시, 표현한 목표와 방법 그대로 항쟁과 운동이 전개된 것은 아니지만,

8) 최연구, 『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적·조직적 발전과정』,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246쪽.

9)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사상이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형성사, 1988, 20쪽.

10) 윤선자, 『5·18 광주항쟁과 1980~199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 『민주주의와 인권』 5-2, 2005.

제시된 문건들 안에는 항쟁과 운동주체들이 이루고자 하였던 목표와 사상을 명시하고 있고, 운동이 전개되던 당시의 상황과 국제정세도 반영하고 있기에 문건을 통해 기초적인 사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석·이향규(1998)¹¹⁾, 이용기(2002)¹²⁾의 논의에서처럼 생애사나 구술사를 활용한 연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학생운동의 리더로서 ‘투옥’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회고 또는 구술이나 면접인터뷰 등에 집중하거나, ‘자서전’, ‘평전’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학생운동가들의 생애사적 흔적을 따라가는 회고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을 주된 자료로 활용할 때에는 많은 고려들이 필요하다. 운동사, 사건사로서 살아있는 당사자의 논의와 역사적 맥락에는 다양한 이견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념의 분화정도에 따른 유형구분

사회운동은 시대적 상황과 장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아래로부터의 저항의 역사를 지칭하는 용어는 민중운동, 민주화운동, 민족민주운동, 민족통일운동 등 다양하고, 용어에 따라 그 강조내용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¹³⁾. 학생운동은 사실상 이 모든 부문운동과도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다. 한국 학생운동의 이념에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적 지향이 혼재하거나 서로 얽혀 있었다¹⁴⁾.

11) 김기석·이향규, 『구술사: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사회연구소 집담회 발표문』, 1998.

12) 이용기 『구술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58, 2002.

13) 정해구, 『한국 민족변혁운동과 5·18민중항쟁』,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1999, 72쪽.

14) 정근식, 앞의 논문, 2013, 38쪽.

또 한국의 학생운동이 근거한 사상적 배경이나 지향하는 목표를 기준으로 근대 학생운동의 유형을 구분할 수도 있다. 유영익¹⁵⁾은 이를 ‘반외세 민족주의형’, ‘반독재 민주주의형’, ‘민중적 사회주의형’의 세가지 이상형(Ideal Typus)으로 구분하고 있다. 물론 학생운동의 주된 요구가 민주주의 회복으로부터 ‘변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학생운동의 조직이 대학별 조직을 넘어서서 전국적 협이나 연합조직으로 전환되는 시점 또는 학생운동 조직의 공개적 합법성의 변화가 중시되어야 한다¹⁶⁾는 논의도 있다.

1980년대의 학생운동은 민주주의와 사회변혁을 위한 주된 동력의 하나로 주목받았다. 학생운동의 기본단위는 학생회와 학회, 이념씨클들이 주도하였다. 변혁노선을 둘러싼 운동사는 이미 1980년대 후반기부터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들은 정리된 바 있다. 일송정 편집부(1988), 강신철외(1988), 최연구(1990) 등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념과 논쟁중심의 학생운동사 정리는 당시 학생운동권 핵심세력이 가졌던 이론적 고민 수준이나 사상적 지향을 보여줄 수 있으나, 전체 학생운동 체계의 구축과 확산을 가능케 했던 다양한 변수들과 참여한 주체들의 고민을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¹⁷⁾.

4. 조직, 사건사 연구

학생운동을 조직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대학 내의 기초조직, 대학조직,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 등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 눈에 띄는 전국적 조직의 등장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었다. 이

15) 유영익, 앞의 논문, 1987, 28쪽.

16) 정근식, 앞의 논문, 2013, 23쪽.

17) 허은, 『1980년대 상반기 학생운동 체계의 변화와 학생운동 문화의 확산』,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2013, 158쪽.

후 70년대 후반에 등장한 ‘전민학련’이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조직활동은 1984년 학원자율화 이후 학생회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또 비합법과 반합법적인 경계를 넘어 공식적으로 대표성을 부여받은 최초의 전국적인 조직은 1987년 등장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출범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은수미(2003)¹⁸⁾의 연구에서는 소규모 의식화 조직들이 작동하는 방식과 학생운동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여 서울대의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김희재(2013)¹⁹⁾의 논의나 다른 논의들을 참조해보면,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조직운영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의 운동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특정 사건의 발생과 전개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문 등에 근거해 정리된 내용들이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80년대의 주요한 사건들은 이른바 ‘공안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과 판결문을 엮어서 만들어진 자료집 형태의 사건사로 정리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서의 여러 자료들에 대한 수집과 분석은 또 다른 학생운동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임에 분명하다(민주화운동 구술자료집 참조). 그러나 오늘날 과거사진상위원회의 제약된 활동에서도 확인되듯이 여전히 이러한 자료수집은 많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어려운 문제이다. 전국적으로 민주화운동사료관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기 많은 시점에서 민주화운동사료들의 수집과 보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부림사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건사연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8) 은수미, 『의식화조직, 사회운동, 그리고 대항이데올로기』, 『저항연대, 기억의 정치』 I, 문화과학사, 2003.

19) 김희재, 『부산지역 학생운동의 메커니즘 연구』,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2013.

5. 통계적 연구

학생운동에 참여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계적 자료들을 근거로 하는 연구이다. 학생운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학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대학사’에서 얻어진다. 이러한 대학별 자료들과 집회 참가인원이나 시위의 횟수, 구속자 수, 단체의 수, 강제징집²⁰⁾, 의문사, 언론노출 횟수, 징계의 정도와 같은 숫자나 통계치로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구축하여 척도구성(참여도, 치열성, 빈도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근식²¹⁾은 이를 서울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징계’의 현황과 사유, ‘구속자’ 추이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앞으로도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기초적인 통계자료들의 데이터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다양한 통계를 활용한 경제지표들과 맞물린 사회운동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학생운동사 연구에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승훈(2005)²²⁾의 논의에서처럼 학생운동가들의 내면적 특성과 사회운동과의 관련성에 관심을 두거나, 김원(1999)²³⁾은 학생운동의 문화적 특성에 주목하여 하위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정근식²⁴⁾의 학생운동이 배출한 정치사회적 엘리트들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 시기에 형성된 학생문화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1968년 혁명으로 불리는 서구 및 일본의 학생운동과

20) 1980년에서 1984년까지 1,152명의 학생들이 강제징집을 당했다(국방부 과거사 진상 규명위원회, 2007, 139~141쪽).

21) 정근식, 앞의 논문, 2013, 52~53쪽.

22) 이승훈, 『한국 사회운동가들의 정체성형성과정: 사회운동참여경험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2005.

23) 김원,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1980년대 한국 대학생의 하위문화와 대중정치』, 이후, 1999.

24) 정근식, 앞의 논문, 58쪽.

의 비교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Ⅲ. 1980년대의 학생운동과 특징

일반적으로 학생운동이란 ‘학생들이 교내의 다양한 문제들이나 정치·사회·문화·민족 문제 따위의 쟁점들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활동들을 지칭’한다. 학생운동의 주체는 물론 학생이다. 포괄적으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교육환경개선운동과 같은 조합적 수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교내의 활동들과, 사회봉사활동·문화 활동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대외적인 활동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운동이라고 할 때는 ‘정치적인 쟁점들에 참여하며 반응하는 좁은 의미의 정치지향적인 활동’들을 말한다. 세계사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학생운동은 노동, 농민, 빈민 등의 취약한 계층과의 연대를 통한 사회변혁에의 지향을 지녀왔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근대성의 형성과정에서부터 사회변화의 원초적 동인으로 작용해왔다. 제국주의에 맞선 청년학생들의 투쟁에서 시작되어 독립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민족해방을 위한 주된 동력이었다.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린 3.15의거와 4.19혁명 역시 학생들이 주축이었고, 박정희정권을 무너뜨린 부마항쟁 역시 학생운동에서 비롯하였다. 또, 한국 민주화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6.10항쟁에서도 학생운동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한국사회의 변화발전에 미친 한국 학생운동의 위상과 역할이 세계사적으로도 많은 조망이 되는 이유일 것이다.

또 학생운동은 ‘변혁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노학연대, 노농연대활동과 같은 선도적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부문운

등을 견인하고 지지·지원하는 활동들을 수행했던 것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그러나 87년 6.10항쟁을 거치고 난 뒤부터는 대중운동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이념화와 운동양상에 대해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90년대 접어들면서는 대중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학생운동의 시대라는 화려한 막을 내리며 본격적인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우리는 이러한 학생운동의 침체를 시대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대안과 새로운 가능성은? 이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해야 할 때이다.

1. 80년대 이전의 학생운동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의 학원은 사실상 병영과 다름없었다.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체체에 편입되어 자치권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관제데모에 강제동원 되었다. 선거가 실시된 3월 15일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김주열군의 시체와 더불어 진행된 4.19혁명은 이승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끝났다.

4.19혁명을 경험한 직후 일어난 군사쿠데타와 거듭되는 저항운동의 실패는 학생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학생운동진영에서의 새로운 인식과 사회변혁운동에 대한 관심은 인식의 폭을 확장하였다. 1970년대 초, 대학 교련교육의 대폭적인 강화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²⁵⁾를 시작으로 1974년에는 전국의 각 대학이 처음으로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란 이름하에 연합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을

25) 1970년대 들어 박정희 정부의 대학통제는 한층 강화되었다. 당시 교련강화안의 골자는 대학 4년간 총 수업시간의 20%인 711시간을 교련에 할애하며 교련교육을 위해 대학에 현역군인을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강렬하게 저항했지만 정부는 교련 강화안을 일부만 완화하여 강행하였다.

계획하였으나 실패하고 박정희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였다. 민청학련 사건의 재판종결일에 맞춰 부산대, 동아대, 수산대 등에서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당국은 강력한 탄압과 함께 1975년 ‘재일교포간첩 김오자사건’을 발표하며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가혹하게 수행하였다.²⁶⁾

1970년대 중반부터 침체에 빠진 학생운동은 지하로 잠적하여 역량 비축에 힘을 쏟기 시작한다. 학생들은 소규모 지하 이념 씨클을 조직하여 사회과학을 학습하면서 앞으로의 투쟁에 대비하였다. 1979년 접어들자 전국 각 대학에서는 유신반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회과학 학술이념씨클들이 대학마다 뿌리를 내렸고, 투쟁 방법도 시위뿐만 아니라 유인물 살포, 낙서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결국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에서의 시위를 기점으로 시작된 항쟁은 민중항쟁으로 발전했다. 계엄령과 더불어 마산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그리고 10월 26일 궁정동에서 총소리를 기점으로 박정희의 가혹한 탄압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전개한 학생들의 투쟁과 시민항쟁은 결국 박정희독재를 끝장내고 말았다.

위에서처럼, 1970년대는 국가권력이 대학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대학 내에서의 군대식 집단훈련과 학도호국단과 같은 병영체제를 바탕으로 반북,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주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정부의 대학생 수에 대한 규제나 금서목록과 같은 사회적 반공이데올로기 통제는 유감없이 위력을 발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운 계기를 모색하는 민주화운동의 싹들이 부산·경남지역에서도 피어났다. 이를 다음의 몇 가지 장면들에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6) 박철규, 『해방직후 부산지역의 노동운동』, 『역사연구』 10, 2003, 188~193쪽.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부산광역시, 1998.

첫째, 1970년대 말의 양서조합의 등장이다. 양서조합은 책읽기를 위한 모임으로 출발하였지만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참가하며 다른 지역에도 과급되었다.²⁷⁾

둘째, 여러 종교단체들의 인권의식향상과 민주화를 위한 활동 그리고 야학활동들이다.²⁸⁾ 이를 통한 학생운동과 노동자들과의 만남은 지속적인 민주화운동의 불씨가 될 수 있었다.

셋째, 대학에서의 학술이념서클 등 새로운 운동역량의 성장들이 있었다.

넷째, 이러한 운동가로서의 자각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대학을 그만두거나 졸업하고 현장으로 취직을 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하며 노동대중을 의식화, 조직화시키는 것을 우선시하는 활동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현장준비론’이 8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학생운동의 주된 사회진출 흐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970년대의 학생운동은 한국의 시민사회의 형성과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선도적이며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선도적인 학생운동의 실천이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민중항쟁으로서의 성격으로 본격적으로 전화된 것은 ‘부마항쟁’에서부터였다. 이는 이후 5.18과 87년 6월항쟁의 시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물론 활동가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성찰과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뇌의 시간들로 민주화운동의 저변이 확대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27) 당시 서울지역의 학습커리큘럼을 도입한 부산 양서조합의 스테디는 학습단체의 질적 수준향상과 조직확산에도 기여(박철규, 앞의 논문, 2003, 199쪽)했다고 평가받는다. 부산의 양서조합활동은 부산의 사회운동세력의 사실상의 저수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8) 이상록, 조태원 등 중부교회의 학생 스테디그룹에 함께한 학생들은 부산대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위를 주동(1978년)하고 조직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시도하였다.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의 상황에서 조직화된 사회운동이 전체 운동을 주도하기 이전 시기에 있어서 ‘부마항쟁’ 당시의 선진적인 활동가들의 투옥과 탄압 그리고 석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치사회화를 통한 인재 배출이 있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80년대 초반기의 학생운동과 특징

한국의 사회운동에서 1980년대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대두한 ‘현장론’과 ‘정치투쟁론’ 사이의 논쟁에서 싹트기 시작하여, 유신정권의 붕괴 이후 ‘민주화의 봄’ 시기에 벌어진 ‘단계적 투쟁론’과 ‘전면적 투쟁론’ 사이의 논쟁으로 이어지고, 또 1980년대 초반 ‘야학비판’과 ‘학생운동의 전망’ 사이의 논쟁²⁹⁾들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1) 무림-학림논쟁: 학생운동 최초의 노선투쟁

80년 ‘민주화의 봄’의 실패 원인과 향후 운동 방향을 놓고, 2학기 접어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1980년 민주화 운동 당시 ‘서울역 회군’과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사실상 학생운동진영을 무림파와 학림파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다.

무학논쟁은 학생운동사상 최초의 집단적 이론투쟁이었다. 당시 무림파는 학생운동의 주류로써 다수파였다면 학림파는 소수파로써 이에 맞서고 있었다. ‘무림’과 ‘학림’ 논쟁으로 알려진 이 논쟁에서 ‘무림’ 쪽은 아직 대중운동의 역량이 미성숙하였기 때문에 군부독재와의 전면적인 투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민주변혁운동의 주력군인 학생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29) 임경민, 『NL이나PD냐, 학생운동의 노선투쟁』, 『신동아』 7월호, 1989, 404쪽.

이에 반해 ‘무림’과의 노선투쟁을 통해 형성된 ‘학림’세력은 무림과에 대해 학생운동의 위치를 과도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조직보신주의’, ‘준비론’, ‘대기주의’에 빠져 당면투쟁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광주학살로 군부독재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학생들이 군부독재와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³⁰⁾ 학생운동이 반독재투쟁에서 선도적 역할³¹⁾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80년 12월 11일 서울대에서 일어난 ‘반제 반과쇼 학우 투쟁선언문’³²⁾ 시위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림쪽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무림쪽 조직원 대다수가 구속 또는 강제입영되는 사건이 발생한다.³³⁾ 결과적으로 1981년 학생운동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학림 쪽으로 옮겨갔다.

학림쪽의 정식 명칭은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이었다. 최초로 전국적인 조직이 결성된 셈이다. 81년 봄 전민학련 주도로 학생 시위가 재연되기 시작했다. 3월 19일 서울대 시위를 시발로 5월 중순까지 성균관대, 부산대 등에서 모두 8차례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5월 27일에는 서울대생 김태훈이 “전두환 물러가라”고 외치며 도서관 6층에서 투신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들의 투쟁이 계기가 되어 학생운동은 5.18의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 과거의 투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81년 6월 경찰의 수사로 전민학련은 와해되었으나, 학생운동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학논쟁은 민족민주운동의 주

30) 「학생운동의 전망」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무림의 논리에 대해 비판했다.

31) 한국현대사를 통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문제제기집단’으로서의 학생운동이 선도적인 투쟁을 통해서 ‘문제해결집단’으로서의 기층민중운동(특히 노동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강신철외, 앞의 책, 1988, 25쪽)고 주장하였다.

32) “시위만능의 투쟁관은 타기되어야 한다”면서 학생운동의 내적 준비를 해야한다는 내용에 초점.

33) 이른바 ‘무림’이란 학내의 중심조직을 파괴하려던 경찰이 수사상 별다른 ‘조직’이 드러나지 않자, 오리무중(五里霧中)이라는 뜻에서 ‘무림’이라고 이름붙였다(강신철외, 위의 책, 1988, 21쪽 참조).

체가 민중이며, 청년학생은 전체운동의 주력군의 역할을 담당해야³⁴⁾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무학논쟁이후 학생운동의 주류를 점했던 정치투쟁 강화론에 대해 광범한 대중과의 결합문제를 강조하는 대중기반 강화론이 대두되었다. 이 논의는 이후, MT(반독재민주화투쟁위원회, 민투그룹)-MC(주류, 무림연합)의 논의로 이어진다.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노동현장 준비론’-‘주화론’-‘야학비판’-‘무림’의 흐름에서는 대중운동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정치투쟁 우위론’-‘주전론’-‘학생운동의 전망’-‘학림’으로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전면적인 투쟁과 선도적인 활동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흐름에서 있었다. 이후 이 논의들은 84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논쟁에서 학생운동 전반으로 영향을 미친 민주변혁논쟁(CNP)³⁵⁾으로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학생운동의 노선대립의 역사적 뿌리가 무학논쟁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서클운동과 패밀리조직의 형성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학생들에게 광주의 아픔과 트라우마는 한국의 기형적 정치지형과 맞물리며 재생산되었다. 80년대 전반을 주름잡았던 구호는 ‘광주학살 진상규명’, ‘군부독재 타도’였다. 결과적으로는 87년 6월 항쟁의 시기까지 청년학생 운동가들이 민주화운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저항의 원천은 5.18광주학살과 쿠데타에 대한 저항의지였다. 지배체제로 편입되었던 4.19세대와 뚜렷이 대비되는 지점이다.

34) 최연구, 앞의 논문, 1990, 248쪽.

35) CDR(Civil Democratic Revolution, 시민민주변혁론), NDR(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 민족민주변혁론), PDR(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민중민주변혁론)으로 갈라졌는데 이 논쟁은 NDR론의 잠정적인 승리로 귀결되었지만, ‘민족’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는 이후의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최연구, 위의 논문, 1990, 255쪽 참조).

유신체제는 긴급조치 9호로 많은 학술이념서클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잃게 만들었지만, 80년 광주에서의 뼈아픈 경험을 거치며 변혁운동으로서의 운동에 대한 자각과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 등장한 것이 서클운동이었다. 이 서클운동은 반합법 또는 비합법적으로 존재하였고 서클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속칭 패밀리(Family)로까지 발전되었다. 이들 패밀리는 그 연원이 수십년에서 수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는데 그 어느 것이든 서클의 단순한 확장에 불과한 것이었다.³⁶⁾

서울대에는 이른바 ‘패밀리’라고 불리는 언더서클이 100여개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중 사회과학을 정통으로 공부한 그룹이 20여개 정도였다.³⁷⁾ 1981년 안기부는 ‘문제서클’이 전국적으로 68개(서울 49개/지방19개)가 있다(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2007:164-167)고 파악했다. 반합법적이거나 공개된 내용이 이 정도였으면 드러나지 않았던 서클은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1982-3년 전국의 대학가에서는 과별로 학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학과를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학습과 대중활동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기존의 언더서클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교육과 조직은 언더서클에서 담당하고 대중동원은 학회나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활동의 대중적 확산이 시작되었다. 당시 학생운동의 조직은 MC(Main Current), 동원책임자(post)를 중심으로 움직여 이른바, 포(Po) 시스템(System)이라는 구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³⁸⁾ 이러한 서클과 학회의 대중동원에 자신감을 얻은 학생운동의 지도부들은 대학간 연합시위를 추진하는 데로까지 나아갔다.

36) 강형민, 「1980년대 조직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경제와 사회』 6, 1990.

37) 허은, 앞의 논문, 2013, 175쪽.

38) 포시스템이란 포스트체제라는 말의 영어식 약칭표현으로서, 포(PO)란 의식화조직의 재생산을 책임지는 담당자와 달리 투쟁에 대중을 동원하는 실천활동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학과포(PO), 단과대학(PO), 중앙포(PO)등으로 이루어진다(고원, 2013, 272쪽. 은수미, 앞의 논문, 2003, 210쪽).

부산지역에서도 1978년 말경에는 부산대학 내에 학생운동을 지향하는 하나의 분명한 학내 지하서클이 태동하고, 이를 토대로 1979년 봄에는 각 학년별 조직체계와 그 후의 재생산구조까지 갖춘 비공개운동조직(이른바 패밀리구조)이 생겨나게 된다.³⁹⁾

이상록, 고희석 등이 이호철, 노재열(77학번), 김진모, 최병철, 정수철, 유장현, 유동현, 김영, 남경희(78학번)등을 규합하고 정귀순, 이정애, 부경란, 최성민, 김정현, 손동준(79학번) 등 신입생까지 조직화시켜냄으로써 학년 간의 재생산 라인이 구축된 조직체계가 상당수의 인원을 포괄하며 확립⁴⁰⁾되었다. 이것이 일명 ‘도깨비 집’ 혹은 ‘사랑공화국’으로 불리는 부산대 지하서클이었다. 특히 1979년 여름 무렵이 되면 위의 지하서클이 중심이 되어 공개서클들까지 포괄하는 꽤 광범위한 협의체도 만들어진다.⁴¹⁾

IV. 이른바 ‘부림(釜林)’ 사건 : 조작된 조직화가 역사로 남게 되다

1980년 ‘민주화의 봄’의 실패와 향후의 운동 방향을 둘러싼 학생운동의 논쟁에서 비롯되었지만, 무림-학림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른바 ‘학림’ 사건은 1981년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학생운동단체 중 반국가단체를 처벌한 사건을 지칭한

39) 김희재, 앞의 논문, 2013, 365쪽.

40) 김희재, 위의 논문, 2013, 365~366쪽.

41) 부산대 지하서클인 ‘도깨비 집’은 이호철을 협의의 창구로 하여 ‘아카데미’의 김종세, ‘성야’의 안승문이나 신재식, 상대의 ‘경제사학회’, ‘전통예술연구회’, ‘영목’ 등과 시국에 대처하는 방향과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움직임을 모색하였다(박철규, 앞의 논문, 2003, 200쪽).

다. 당시 전민학련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첫 모임을 가진 대학로에 있던 ‘학림다방’에서 했다는 사실에서 유래한 말로 경찰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지칭해서 붙였던 명칭이었다. 이 ‘학림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발단이 되어 ‘부림사건’이 시작된다.

1. 조작으로 등장한 부림사건(釜林事件)

‘부림’ 사건은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고 불리운다. ‘학림 사건’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을 따왔기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부산지역의 종교단체, 학생, 재야세력들 전체가 관련자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이상록(27, 부산대졸, 선반공), 고희석(26, 교사), 송세경(30, 회사원), 설동일(26, 농협근무), 송병근(24, 부산대졸, 공원), 노재열(24, 부산대 4년), 김희욱(32, 교사), 이상경(부산대) 등 8명이 9월 7일 1차로 구속되었고, 10월 15일 2차로 김재규(33, 상업), 최준영(29, 설비사무사), 주정민(24, 부산대졸), 이진걸(23, 부산대 4년), 장상훈(24, 부산대졸), 전중근(공원), 박옥영(25, 부산공전 졸), 윤연희(24, 교사) 등이 구속되었다. 이후 3차로는 당시 도피중이던 이호철(24, 부산대 졸), 설경혜(23, 교사), 정귀순(22, 부산대졸) 등 3명이 다음해 4월 구속되었다. 아울러 대학시위 중에 구속된 김진모(부산대 4), 최병철(부산대 4), 유장현(부산대 4) 그리고 탈영한 김영(23, 군인) 등 총 22명이 구속되었다.⁴²⁾

42)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8, 457쪽.

이 사건은 10.16부마항쟁으로 구속된 후 석방된 사람들과 이후 1980년과 1981년 부산대에서 있었던 시위사건의 배후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서울의 전민노련과 전민학련사건과 연관지어 대대적인 검거를 단행한 것이었다. 전두환 정권 초기의 저항세력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 검거사건이었다. 정권 초기의 불안정 요인에 대한 사전 정리작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부산의 학림사건, 광주의 햇불회사건, 공주 금강회사건, 대전 아람회사건 등이 같은 시각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된 수사⁴³⁾였다.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은 체계적인 조직적 틀을 통해서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1970년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자생적인 활동과 지역적 연고를 가진 서울지역 대학 출신들이 내려와 활동 중이었고, 이들과 관련이 있던 당시의 몇몇 부산대생들이 참가하였던 양서조합, 그리고 부산대 안의 몇몇 이념적 학습조직(그나마 부마항쟁 이후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정도가 그 실체의 전부였다고 볼 수 있다.⁴⁴⁾

“당시 부림사건 관련자들 중에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가서야 처음 상견례를 한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서로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 모두 그들의 각본 속에 끼워 넣어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냈다. 당시 몇 명이 다방에 앉아 얘기 나누는 것까지 ‘반국가단체 고무 및 찬양으로 몰아붙여 징역 10년에서 3년까지를 구형했다.’⁴⁵⁾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 등

43)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8, 457쪽.

44)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98, 457쪽.

45)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98, 458쪽.

이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 관계자들은 “영장없이 체포·구속되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장장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 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독서모임이 반국가단체의 찬양활동으로 조작됐고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만나 것이나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들고 찾아간 것도, 망년회를 한 것이 모두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규정되어 처벌됐다”라고 주장했다.

2. 부림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부산대 교내 시위 주도 및 부림사건 관련하여 3차 기소자로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계엄법위반으로 징역10년이 구형되었던 이호철에 대해 부산지법 제3형사단독 서석구 판사는 “정부시책을 비판했다고 하여 이를 확대해석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다룰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무죄로 보고 그 외 법률위반만 인정하여 징역1년을 선고하고 이호철을 은닉하고 도주를 도와주었으며 집회 등에 참가한 부산공대 3학년 정귀순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감전국민학교 교사인 설경혜에 대해서는 설경혜의 오빠가 구속돼 있고 확고한 신념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감상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선고유예하였다.

그러나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하여 사건이 조작”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으며,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음”을 발표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 결정을 내

렸다.

이에 재심이 청구되어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12월, 서울고법 형사 5부는 동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리고, “사법부의 과오로 인해 피고인들이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 판결이 조그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2014년 2월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른바 ‘부림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5명의 청구인에게 33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V. 지역내 운동의 성장과 부림사건 : 민주화운동 주체들을 형성하다.

1980년부터 1983년 12월의 학원자율화조치와 함께 시작된 정치적 유희기까지 부산의 학생운동진영은 새로운 독재정권의 지극히 억압적인 통치체제로 인하여 투쟁역량이 위축되었다. 그러나 악조건속에서도 서서히 전열을 재정비하는 기간이었으며, 70년대 후반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주체들이 다양한 계기를 겪으면서 형성되어가고 있었다. 민주화운동 주체세력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1)양서조합 (2)종교계 (3)서울에서 내려온 활동가들 (4)원로 재야세력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민주화운동 주체세력 중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김광일, 이홍록, 김형기, 박상도, 최준영, 최성묵, 송기인, 정인숙, 홍점자, 설동일, 송세경 등을 들 수 있으며, 자생적 민주화운동세력의 선배그룹으로는 이상

록, 노승일, 고호석, 조태원, 노재열등을 들 수 있다(부산민주운동사, 1998; 324). 또 지역의 민주화원으로 세력들도 말 그대로 세력을 형성하기에는 80년 이후까지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이 시기에 나름대로 지역의 어른과 원로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중에는 樂山 김정환, 山水 이종률, 배다지, 김상찬, 海巖 최상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⁴⁶⁾

1. 부림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양서조합

다양한 공안사건으로 타격을 입었던 부산지역에서도 학생운동의 활동가들이 출소하고 청년층으로 성장하며 1970년대말 부산지역에서는 양서조합이 만들어진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종교단체들의 관계망이 서서히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영향받은 학생들이 학내에서도 독서서클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양서조합은 1979년 4월 부산에서 최초로 결성되었다.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75년 2월 출소와 더불어 1976년 부산으로 와서 활동하게 된 김형기(현 경주 팔복교회)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도시로 전파되었는데 대부분 부마항쟁과 5.18을 거치면서 해산되었고 가장 오래 존속한 서울 양협도 1982년 3월경 해산하였다.⁴⁷⁾ 1977년 9월에 발기인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발기위원장은 김희욱(영락교회 청년위원장)이 맡았다. 1977년 11월 16일 발기인대회를 했는데 박현삼, 김동수, 김광일, 이홍록, 이길웅 등 20여명의 명망가를 발기위원으로 출발하였다(초대 이사장 이홍록변호사). 1978년 4월 5일 부산 YMCA예식장에서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렸다. 창립당시 조합원의 수는 107명이었다.⁴⁸⁾

46)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8, 340쪽.

47) 차성환,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조명1-부산양협운동의 전말』, 『기억과 전망』 가을호, 2004, 69쪽.

“78년말 하반기 부산으로 나온 나는 부산운동권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판단하고, 먼저 부산대학생 2학년들을 중심으로 한 스터디그룹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 그리고 부산대학 내 운동권 기반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양서조합내의 신선명, 오홍숙, 박철수, 구성에 등 일부 진보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부산운동권 재생산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학생운동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⁴⁹⁾

당시의 회원 구성을 보면 대학생, 일반시민, 가정주부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까지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전체의 거의 50%는 대학생층이었고, 일반시민들은 주로 회사원으로서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았다. 직업으로는 판사, 변호사, 목사 등이 있었고 그밖에는 교사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75%, 여성이 25% 정도 되었고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의 젊은 층이 주류(80%이상)를 이루었다⁵⁰⁾는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양서협동조합은 이미 부산지역의 시민·학생들을 함께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재야운동과 학생운동가들의 자연스러운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마항쟁 직후인 79년 11월 19일 군사정권은 양서협동조합을 부마항쟁의 배후조직으로 만들어가려고 했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10.26사건으로 박정희가 피살됨으로써 중지되었다. 그러나 10.26이후 계엄사령부는 결국 양협의 해산을 압박하여 이사회를 열어 해산하게 만들었다. 1978년 4월에 창립하여 1979년 11월 19일까지 약 1년 반 동안 존속했던 부산양협은 신군부의 강압으로 마침내 종언을 고하게 되고 말

48) 차성환, 앞의 논문, 2004, 72~73쪽.

49)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8, 330쪽.

50) 차성환, 앞의 논문, 2004, 81쪽 재인용.

았다.

2. 종교계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활동

1970년대에는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에서는 종교계의 활동들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부산 양협의 활동에서도 기장, 예장 등 기독교단에 소속된 이들 기독교청년들이 중심이 되었다. 여기에 명망가그룹과 서울지역 유학생그룹 그리고 중부교회 청년회그룹, 부산 지역 대학생과 청년그룹 등이 함께 결합했다.⁵¹⁾

1976년에는 중부교회에서 ‘주보(週報)’를 발행했는데 반정부적인 내용이 실렸다고 중부교회 청년부 회원들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최성묵, 임기운 목사와 같은 진보적인 목회자들에 의한 시국설교는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중부교회에서는 기독교학생연맹(KSCF)소속이던 조성삼이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중부교회 대학생부는 ‘서울에서 내려온 김형기, 최준영, 설동일과 만남으로서 민주화운동의 대열에 주축을 형성’⁵²⁾하게 되었다. 76년에 창립한 기독교청년협의회(EYC)의 활동은 70년대 후반 종교인권 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는데 이러한 종교적 연결망은 전국적인 연대의 기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에서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부산교구에서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다든지 결의문채택 등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였다.

노동의 영역에서도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 도시산업선교회를 이끌었던 박상도(구포 참마루교회 출신)와 JOC(가톨릭 노동청년회)를 중심으로 하는 야학활동이 그것이다. 이후 불교계에서도 야학활동에 동참하였

51) 차성환, 앞의 논문, 2004, 71쪽 참조.

52)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8, 304쪽.

다. 그러나 유신정권은 70년대 후반부터 노동현장에서의 산업선교에 집중되었던 활동들을 용공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산업선교관계자들이 반공법협의로 조사받았는데, 79년 3월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실무자들이 반공법으로 구속되는 일도 발생했다.

당시의 분위기는 학생운동을 하면 노동운동으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인식이 매우 강했다. 이상록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조직적인 흐름이 형성될 정도였다. 이른바 ‘현장투신’이 전국적인 흐름이자 전략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학생운동의 한계를 벗어나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서의 현장운동이라는 논리가 확산되기 시작한 셈이다. 이러한 흐름들은 부마항쟁이 학생운동만이 아니라 이후의 시민항쟁으로 전화될 수 있는 도화선이 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3. 학생운동내 언더서클의 형성

1980년대 상반기는 학생운동이 이른바 ‘언더서클’이라 칭해진 비합법조직에 기반하여 전개되었다. 학생운동이 신군부의 탄압으로 다시 긴급조치 9호 시기와 유사한 비합법 운동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1980년 5.17쿠테타 직후부터 학생운동권 내에서 언더서클 운동체계가 부정된 1986년 중반 시점까지이다.⁵³⁾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의 부산지역의 대학가에서도 학생서클에서의 필수 커리큘럼안에는 이영희의 ‘우상과 이성’같은 현실인식에 대한 논의나 ‘경제사’ 관련 내용들이 많았다. 당시의 스터디는 대부분 일본원서를 번역하며 읽었던 시기이지만 윤노빈이나 하일민(철학), 정동현(상대)과 같은 비판적인 접근과 논리가 가능했던 철학이나 경제사 관련한

53) 허은, 앞의 논문, 2013, 161~162쪽.

진보적인 교수들의 간접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상록의 경우에는 1973년 이래 운동의 단절과 공백을 경험하고 있던 학생운동의 ‘재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학생운동씨클을 만들고자 하였다. 1970년대 후반, 서울지역에서 온 민주화운동 후원세력의 상당한 역할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서서히 형성되는 부산지역의 자생적 민주화운동세력은 그들의 선배세대들의 기독교적, 자유주의적 성향을 극복해가면서 맑시즘적 논의에 바탕한 사회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해가면서 그들 선배세대와의 차별화를 시도해가기 시작하였다.⁵⁴⁾ 이후 78년부터 부산대내의 본격적인 활동들이 시작되고 목적의식을 지닌 선후배의 만남들이 있었는데, 79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지역의 대학연합서클인 ‘아카데미’, ‘성아’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술이념서클들이 스터디와 연합모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10.16부마항쟁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79년초에 술자리에서 ‘사랑공화국’이라고 하자는 제의에 동의하고 이후 이 사랑공화국은 조직외부 학생들에 의해서 일명 도깨비집으로 불리게 된다. 이 도깨비 집 중견 리더들과 등록된 일부 공개서클들 사이에 비공식적 협의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호철(도깨비)과 김종세(아카데미), 야학팀(영도지역)등이 주축이 되고, 여기에서 2학기 되면 범대, 상대, 도깨비 집 등에서 한 건 한다는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⁵⁵⁾

“서로 다른 팀은 잘 모르지만 대개 4학년 7명, 78학번 6-7명씩 2팀, 1학년 5-6팀 등 총 60명 내외였다. 당시 공개기구(‘동녘’ 이진걸, ‘아카데미’ 김종세, ‘성아’ 신재식, 안승운, ‘전통’)와 언더씨클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⁵⁶⁾

54)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8, 333쪽.

55)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98, 338쪽 재인용 및 수정.

1980년 민주화의 봄 시기에 조직되었던 ‘지역사회연구회’, ‘쿠사’, ‘아카데미’, ‘성아’, ‘동넙’ 등과 같은 이념서클들을 중심으로 한 공개적인 활동들이 무산되었으나, 다시 ‘사랑공화국(일명 도깨비 집)’을 중심으로 한 학내 비공개 스티디그룹, 이른바 언더서클을 중심으로 하여 소수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사회과학 학습을 통해 조직적인 학생운동을 양성해 내면서 조직을 정비해 나가기 시작했다.⁵⁷⁾ 이처럼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한 사회과학 서클의 태동에 민주화운동 후원세력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마항쟁이 발생하게 되나 또한 이는 이들 학생운동과 재야세력들은 결합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분화를 예비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였다.⁵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림사건을 전후한 1980년대 초반기의 부산지역의 학생운동과 사회적 배경, 특히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다음의 내용들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주로 서울지역에서 수학하던 부산출신 학생들이 목적의식적으로 부산지역에 진출하였다. 둘째, 대부분 민청학련사건 또는 70년대 초의 민주화운동을 종교조직의 틀 내에서 경험한 세대들이다. 즉, 나름대로의 종교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이들은 부산지역내에 사회과학서클과 학교밖의 ‘양서조합’을 통해 부산의 ‘자생적’ 민주화운동세력을 형성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넷째, 이들 민주화운동 주체세력과 부산지역의 자생적 민주화운동세력이 부마항쟁을 거치며, 이른바 ‘부림사건’을 통해 그 이념적, 인맥적 간극을 보이면서 분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56)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8, 339쪽 재인용 및 수정.

57)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98, 455쪽.

58)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98, 340쪽 참조.

VI. 부림사건의 현재적 의미

민주운동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통해 부림사건에 대한 재평가와 재조명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부림사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비록 부림사건이 조직화된 준비와 결의에 의한 결과물은 아니었고, 권력의 조작과 억지에 의해 구성되었다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부산지역의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이자 대중적 학생운동으로의 전화에 주된 동력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현재적 의미와 성과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학생운동은 오늘날 청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근거한 실천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지역 민주화운동의 구심적 형성 및 조직화에 기여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에서 엄청난 파문을 던진 것이 바로 ‘부림사건’이다. 부림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운동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록의 자평에서처럼 부산지역의 운동에 대한 한계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평가도 있다.

“우리측 활동가들의 문제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운동내에 이미 발생해 있던 모순에 대한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능력만 있었다면, 아마도 상황은 약간 달라졌을 것이다. 즉 지역 전체 운동의 합리적인 지도역량과 조직의 부재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서울 같았으면 쉽게 그러지는 못했을 것이다. 서울에는 탄압에 즉각 반발하는 여론과 엄호할 수 있는 양심세력이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산처럼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개 합법조직과

세력의 존재여부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고, 부산지역에서는 거의 이러한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⁵⁹⁾

이러한 중심조직의 문제의식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림사건을 중심으로 이후 사회운동의 새로운 조직화에 대한 성찰과 운동과제들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후 이 사건으로 구속자의 부모들과 재야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발족되어 인권탄압에 대한 항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노무현, 김광일, 문재인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인권변호사’가 등장하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를 쟁점으로 삼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영화 ‘변호인’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부림사건의 관련자들이 출소하면서 부산지역에는 비로소 조직화된 재야세력이 형성되었다. 다양한 사회민주화 세력들이 조직되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에서 환경 및 인권운동의 단초가 되는 공해문제연구소(1984), 인권위원회 부산지부(1984), 부산민주시민협의회(1985) 등이 부림사건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되면서 비로소 부산에 민주화운동의 대중적 기초가 마련되었다.⁶⁰⁾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운동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간다.

특히 1970년대 후반 이후 형성되어 이제는 완전히 자체의 ‘재생산구조’를 갖춘 학원내의 사회과학서클들은 이후 조직화, 대중화를 거치면서 6월 민주항쟁으로 나아가는 학생운동의 지도부를 배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산의 민주항쟁을 주도했던 국민운동본부의 주된 인적자원의 보고가 되었다. 이미 사회진출을 통해 배출된 직장인들, 이른바 ‘넥타이

59)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8, 458쪽.

60)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98, 435쪽.

부대'의 적극적 참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서클이나 선후 배관계와 같은 연결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⁶¹⁾

87년 6월항쟁의 시기에 국민운동본부로 상징되던 항쟁지도부와 학생운동간에 유대감과 결속력이 매우 견고했던 것이나 가톨릭센터 농성으로 이어지는 끈질긴 투쟁이 가능했던 것에는 이처럼 서클활동을 중심으로 다져진 운동가들 사이의 끈끈한 관계가 뒷받침되어 있었다.⁶²⁾ 이는 7-8월 노동자 대투쟁의 과정에도 적극 반영되어 부산에서 노학연대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2. 청년학생의 '선도성'에 대한 역할 인식

학생집단은 신분적으로, 세대적으로 뚜렷한 특징을 지닌다.⁶³⁾ 84년 졸업정원제가 시행되기 이전의 시기에서 한국에서의 대학생은 '엘리트'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981년부터 시행된 대학졸업정원제의 실시로 인해 대학정원이 급증하게 되었다.⁶⁴⁾ 대학생수의 급증은 사실상 학생운동의 세력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한 바 크다. 또한 학생의 세대적 특성상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측면과 이로 인한 계급적인 이해관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청년세대의 특징은 두드

61) 87년 당시에만 해도 서울지역 대학의 학교당 평균 서클의 수가 대략 40-50여개 였던 데 비하여 부산대에는 무려 120여개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과학 서클만도 30여개나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서클조직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여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서클을 통한 민주화운동의 연결망 확대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부산의 독특한 운동조직이었다고 하겠다.

62)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8, 436쪽.

63) 칼 맨하임(K.Manheim)은 사회변동과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주요한 범주로서 '세대'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이 세대는 코호트나 연령집단과 같은 명목적인 구분이기보다는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동질감을 지니는 실재하는 세력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세대이다.

64) 1981년 시행된 입학정원제에서 졸업정원제로의 대학교육 정책의 변화는 대학환경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기존 졸업정원의 30%에 달하는 입학생 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리진다. 이러한 세대적 특성은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공분하고 공감하는 시대의식을 공유하게 된다. 세대별로 형성된 사회적 집합의식은 뚜렷한 차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마련이다.⁶⁵⁾

청년학생의 세대적 속성들은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회적 위치를 결과적으로 제한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 학생운동의 발달과정에서는 이러한 속성들이 한 군데로 집중되어 표출되었는데, 이렇게 두드러지는 특징을 학생운동의 ‘선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불의에 항거하며, 때로는 죽음으로까지 저항하는, 사회적 부정의에 맞서며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운동의 결과는 그 이념적 지향에 의한 행위이든 조직적 저항이었던 대부분 한국사회운동과 변혁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시민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은 한국사회운동사에서 그 충분한 운동사적 의미를 인정받은 셈이다.

부림사건으로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이 침체되어 있던 1982년 3월 고신대, 부산대, 부산여대 학생들에 의한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광주항쟁 당시의 미국이 취한 역할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해방신학에 바탕을 둔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배양하였던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⁶⁶⁾

이 사건은 당시의 친미 반공주의적인 시대적 분위기에서는 ‘반미’라는 구호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수단으로 인한 사상자의 발생으로 일반시민들로부터 호응도 받지 못하였다. 특히 학생운동 내부에서의 심각한 비판들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투쟁의 ‘격렬성’과 ‘대담성’은 이후 학생운동의 방식에 많은 변화를 던져주었다. 그러나 이후 광주 5. 18에서의 미국의 개입여부와 책임에 대한 문제, ‘반미’에 대한 여론이 환

65) 한국은 급격한 근대성의 형성과 굴곡의 역사를 거쳐왔다. 이러한 시기별로 형성된 집합의식과 경험의 차이는 학년의 위계서열을 중심으로 하는 뚜렷한 ‘세대의식’의 차이로 각인되어 영향을 미쳤다.

66)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8, 435쪽.

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83년까지만 해도 학내시위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 시위를 전개(83년 4월)하는 등 체포와 구속의 위협을 감수하고서도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것 또한 청년학생이 지닌 고유한 ‘선도성’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학생운동에서의 반독재와 민주화에 대한 선도적인 활동들은 다른 민중운동진영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었고 학생운동이 사회전체 변혁운동으로서의 지향을 지니는 선도부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선도투쟁을 통해 80년대는 가히 학생운동이 전체 사회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마사건의 당사자들은 부마항쟁이나 4.19혁명에서의 경험에서의 시민항쟁을 경험한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의 문제제기가 노동자, 서민을 포함한 시민으로 확산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다. 학생운동은 문제제기하며 시민항쟁을 촉발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는 청년학생운동의 선도성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었으며, 전체 사회변혁운동에 대한 학생운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이후에도 노동조합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로 이어졌고 이러한 헌신적이고 선도적인 노력들이 있었기에 87년 6월 시민항쟁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

3. ‘관심’과 ‘연대’로 새로운 청년학생운동의 시대

학생들은 학생운동의 활동가로써 또는 학생회나 동아리의 구성원으로써 다양한 민주주의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화하게 된다. 학생회나 학생운동의 과정을 통해 ‘훈련된 활동가’들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배출해왔다. 학생운동

가들은 시민사회의 안정적 기반이 되어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깨어있는 시민들을 확산시키는 데 뚜렷한 기여를 해왔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보편적인 학생운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 학생운동이 한국 사회발전에 기여한 두드러진 특성이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발달사는 바로 학생운동의 이러한 훈련된 활동가와 ‘인재배출’에 힘입은 바 크다. 이는 사실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림사건의 당사자들은 7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노동자와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했고, 한국사회의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국가폭력의 피해당사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운동가들은 노동현장으로, 시민단체의 활동가로 일상을 영위하는 민주시민으로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의 작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38년 전의 선도적인 학생 운동가들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군사정권의 독재에 맞서며 민주주의와 새로운 사회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오늘의 우리 학생들은 무차별적인 경쟁과 불공정, 불의에 당당하게 맞설로 맞서고 있다는 측면에서 청년학생운동의 선도적 특성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청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으로써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의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한반도에서는 남북대립이라는 군사적 긴장과 단절속에서는 이념적 대립과 갈등관계를 넘어설 수 없다. 서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근대성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경험을 이제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바로 ‘분단체제의 종결’,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부각시킨다. 부림사건 세대와 오늘날 청년학생세대는 ‘분단’이라는 아픔에서 하나의 축 위에 서 있다. 이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부림’ 사건은 언제든지 현재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근대사는 증명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사상이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형성사, 1988.
- 강형민, 「1980년대 조직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경제와 사회』 6, 1990.
- 고 원, 「386세대의 정치의식변화연구」, 『동향과전망』 63, 2005.
- _____, 「민중민주와 학생운동의 집합적 특성과 메커니즘」,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2013.
-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1, 국방부, 2007.
-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학원·간첩편(VI)』, 국가정보원, 2007.
- 김기석·이향규, 「구술사: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사회연구소 집담회 발표문, 1998.
- 김 원,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1980년대 한국 대학생의 하위문화와 대중정치』, 이후, 1999.
- 김희재, 「부산지역 학생운동의 메커니즘 연구」,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2013.
- 노경민, 『연합뉴스』 2009.8.14. ‘부림사건 연루자 28년만에 명예 회복’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2013.
- 박철규, 「해방직후 부산지역의 노동운동」, 『역사연구』 10, 2003.
-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부산광역시, 1998.
- 유영익, 「한국학생운동사 개관」, 『아세아연구』 77, 1987.
- 윤선자, 「5.18 광주항쟁과 1980~199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2005.
- 은수미, 「의식화조직, 사회운동, 그리고 대항이데올로기」, 『저항연대, 기억의 정치』 1, 문화과학사, 2003.
- 이승훈, 「한국 사회운동가들의 정체성형성과정: 사회운동참여경험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66, 2005.
- 이용기, 「구술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58, 2002.
- 이창연, 「한국 학생운동의 연구경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5, 2005.
- 임경민, 「NL이나 PD냐, 학생운동의 노선투쟁」, 『신동아』 7월호, 1989.
- 정근식, 「학생운동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2013.

- 정해구, 『한국 민주변혁운동과 5·18민중항쟁』,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1999.
- 조희연, 『80년대 학생운동과 학생운동론의 전개』, 『사회비평』 창간호, 1988.
- _____, 『80년대 한국사회운동의 전개와 90년대의 전망』,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 차성환,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조명1- 부산양협운동의 전말』, 『기억과 전망』 가을호, 2004.
- 최연구, 『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적·조직적 발전과정』,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 일송정편집부, 『학생운동논쟁사』, 일송정, 1988.
- 허 은, 『1980년대 상반기 학생운동 체계의 변화와 학생운동 문화의 확산』,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2013.

투고일 : 2020. 05. 25. 심사완료일 : 2020. 06. 24. 게재확정일 : 2020. 07. 08.

| Abstract |

The Present Meaning of Student Movement and
'Burim Incident' in Korea in the 1980s

Jung, Seung-An

The student movement in Korea had a great influence on social transformation and politics. In particular, the 1980s was the so-called "era of student movement." The study of student movement history explains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Korean social democracy and social movement. And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reveal the spirit of the times and explore the possibility and direction of the reflective reconstruction of democracy in our times.

Here, I would like to highlight the flow of the student movement in the 80s and the meaning of the 'Burim-incident'.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student movement and the flow of the student movement in the early 80s will be examined, and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exercise history meaning and background of the 'Burim-incident'. And through the Bourim-incident, we take a look at some of the implications of today's student movement.

In general, student movements refer to activities in which students systematically respond to various problems or political or social issues on campus.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the period around the 1980s, when Korea's student movement, which was cut off through the Korean War, emerged as the mainstay of the popular social movement toward a national organization, was the beginning of a full-fledged student movement.

The situation in the early 1980s and the evaluation of the Gwangju Uprising led to various debates within the student movement. That's what

the so-called 'Moorim-Hakrim'. The "National League of democratic students"-“Haklim” case was initiat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the Burim case was created. However, the Busan pro-democracy movement was not carried out systematically That days. Although the Burim case was not the result of organized preparation and resolution, it was composed of the manipulation and coercion of power. As a result, the Burim-incident became a symbolic event for the student movement and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Busan.

Students' movement forces in Busan, which had been formed spontaneously, began to differentiate themselves in the wake of the Burim-incident. It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entire civil society movement as well as the student movement in the Busan area. Reflections also followed on the new organization of social movements. In particular, following the trend of the Burim-incident, one can see that it is in line with the main general argument of the student movement that the awareness and awareness of the initiative of the student movement and the production of trained activists as members of the civil society. This is a point that needs to be noted in today's student movement.

Keywords : Burim-incident, Student Movement, Democracy, Preceding practice, Association for reading good books

